

민생 제일주의 실현

- 01 활력 돋는 민생
- 02 체감하는 양극화 해소
- 03 건강·안전 걱정없는 사회
- 04 탄탄한 돌봄교육책임
- 05 다함께 문화향유 시대



01

활력 주는 민생



온전한 손실보상과 매출증대를 통해
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
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

-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의 손실보상 제도로 개선
- 손실보상에서 제외해온 인원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등

○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

-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신규 도입

○ 지역사랑 상품권,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
-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상시지원 및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
- 지방정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고객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

○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

-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회복 지원

- 회생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실시
- 대환대출, 무이자 대출 등 포용적 금융정책 확대
-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 실시

○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

- 위드코로나 방역체계, 손실보상, 빅데이터 플랫폼 등 원활한 소상공인 회복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소진기금 확대 편성

○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

-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기준을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
- 지역신보재단중앙회 재보증 운용배수를 신 · 기보와 동일한 적정운용 배수 수준으로 개선

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
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
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혜택(복지) 확대

- 노란우산공제 최소납부금액 완화 등 신규가입 업체 지원 확대
-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임의해지시 퇴직소득세 적용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

- 폐업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방안 마련
-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적시폐업 후 신속한 재도전 지원
-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, 가맹 · 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 및 면제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강화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

- 폐업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 · 재창업 관련 교육 · 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

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○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

-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

○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

-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의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한 '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절차' 활성화
- 차액감액청구권 교육 및 행정지원, 분쟁지원 강화

○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

-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,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 도입
-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, 갱신거절,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

○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

- 임대료,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○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안심상가 지원 확대

-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안심상가 전국적으로 확대

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반영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

- 테마 또는 특색 있는 상권으로 재생시키는 상권르네상스 지정 확대
-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, 온라인 판매, 복합체험 판매 라운지 등 패키지 지원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확대

○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

-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지원
- 골목형 상점이 지정 요건 완화 등 상점이 활성화 촉진
-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연계강화를 통한 특색 있는 상권 조성
- 지역의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유통물류센터(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), 공공 플랫폼 및 재할용센터 설치 및 지원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전문성 강화

- 창업전 필요한 창업교육을 통한 실패의 위험 최소화
- 장인 · 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 · 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 위기신호등 개발

-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방안 매뉴얼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

○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

- 경력단절 여성, 취업준비생,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활성화

○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자원기관 설립 지원

- 상권활성화재단, 시장상권진흥원 등 설립 지원
-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(상인회, 협동조합 등) 설립 지원

작지만 강한 소공인에 대한
지원을 강화하여
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.

○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

- 광역별 1개소 구축, 일반에 개방하여 지역 특화업종 경험 지원

○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

-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
-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, 공동연구개발,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적극 지원

○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
-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 지원 확대
- 공정 자동화,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

○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

-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

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
채무부담을 경감하고
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
-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·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

사회적 약자에 대한
법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
 -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
 -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
 -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
- 미성년상속인의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
 - 성년 후 한정승인 제도 도입

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○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

- 현행 전체 대학생 48%에 불과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70%까지 확대

○ 지자체 차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, 졸업한 청년 부담 완화

○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대폭 확대

- 가구 소득 분위 자격요건 제한 폐지로 학부생 누구나 실질적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- 등록금 부담 높은 전문대학원(로스쿨 등)까지 확대 적용

○ 사교육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플랫폼 구축

- EBS 온라인 학교 전환 및 교재 온라인 탑재, 취약계층 교재 무료 제공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
- 중·고교 시험, 교과서 밖 출제 금지 및 수행평가 공정성 강화
- 사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해 사교육 현황과 원인 등 상시 점검

공공기관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 탐색비용을 줄이겠습니다.

○ 공공기관의 임·직원의 임금 분포를 알리오(ALIO,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)에 공시

- 성별과 정규직·비정규직을 구분한 임금 분포 공시

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실현하겠습니다.

-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주식양도소득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산업을 육성
-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과세하되, 투자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

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.

-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본 철학을 시혜와 지원에서 권리와 자기결정으로 전환
- 정보접근권, 이동권, 지역사회 자립생활권, 문화권, 생활보장권, 노동권, 교육권, 건강권, 가족생활권, 재활권 등 장애인의 제 권리의 체계적 발전 토대 마련

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없이
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
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 70% 1급, 2급,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
- 장애인연금 지급시 부부 감액을 폐지
- 장애(아동)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%로 단계적 확대

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
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.

-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
- 사회복지 종사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단일임금체계 도입 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

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중증요양 가산수당 확대,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,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 및 업무 숙련 보상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

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,
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
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.

-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'연금개혁위원회' 운영
-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재계산과 연계하여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

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현재 80만 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 개로 확대
-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

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
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,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
-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다양화

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
사회보험을 만들겠습니다.

○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으로 사회보험 개혁

- 영세자영업자, 비정규직,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
- 복잡한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
- 지역 건강보험료 형평성 제고

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

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
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.

○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,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
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

암 경험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암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을 마련

ILO 사회보장 협정을 비준하여
국제적 수준의 국민 생활보장을
실현하겠습니다.

- 국제노동기구에서 1952년에 채택한 ‘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’을 비준하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, 국민연금(유족급여, 장애급여) 등 최저 기준 미충족 제도의 확충 및 내실화 추진
-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충족을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의 비준 가능성도 검토

아동,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을
확대하겠습니다.

- 현행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동, 청소년 수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7년에 만 18세까지 지급

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
혁신정부와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.

○ 정부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

-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부투명성 위한 '정보공개법' 개정
- 적극적인 국민 권리구제 위한 '국가옴부즈만위원회' 설치 검토
- 공직자 청렴성과 부패방지 강화 위한 '국가청렴위원회' 설치 검토

○ 국민 주도의 열린 정부 혁신 추진과 정책 혁신

- 국민 주도형 열린 정부혁신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
- 디지털 가상정부(메타정부) 구축 통한 정부혁신과 정책혁신

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
플랫폼종사자와 소상공인의
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직업 안정과 역량 함양 추진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

보건증 발급비용 국가 지원 및 타투 합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○ 보건증 발급비용 국가 지원 확대

- 돌봄 · 가사노동자도 포함하여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무료화
- 발급 지정병원 확대,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
- 산모 · 아이 · 가사돌보미 등 검진과목 표준화

○ 타투 합법화 추진

- 국회에 계류중인 타투 합법화 법안 적극 추진
-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 위한 위생관리체계 구축

